

미래산업 주도 새만금 대전환

민주 이원택 의원, RE100 산업벨트 조성·피지컬 AI 테스트베드 구축 등 6대 핵심과제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갑제·부안을)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을 한 신산업을 육성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 대전환 구상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2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5년간 새만금을 미래 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반시설 지연으로 사업 속도가 더뎠다"며 "이제 기반시설 시대를 끝내고 산업 시대로 과감히 넘어가서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넓히는 전초기지라는 물론 전북 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만금지구의 효율적인 매립과 더불어 매립된 곳에서는 지체없이 산업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29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을 마무리 해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 목표에 맞춰 연차별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새만금 인입철도는 개통 시기를 오는 2033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는 등 공항과 철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지역 간 연결도로 1차 개통과 남부 3축 도로 착공을 임기 내 마무리하고, 신항만 추가 선석과 배후부지를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속도를 높일 것으로 새만금 지구의 교통과 물류 체계 조기에 완공을 기약하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전북을 탈바꿈 시키고 그 위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대전환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북을 먹여 살릴 산업을 세워서 투자가 실제 일자리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하겠다는 게 이 의원의 구상이다.

산업 전략으로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지대로 재편하기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현재 7GW에서 전북 전체 기준 최대 20GW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RE100 산업벨트 조성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그린수소 기반 수소 혁신밸리 조성 △2차전지 및 반도체 실증 △패키징 산업 육성 △농생명 바이오와 서해안 관광 고도화 △연구개발 기반 확충 등을 6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 수변도시를 거점으로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실증·테

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로봇 제조공장이 들어서도록 함으로써 최근 새만금에 10조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힌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만금을 수출형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출기업의 물류·통관·세제 환경을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세계 기업들이 함께 혁신하고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무대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첨단산업, AI 전환,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과 나란히 서야 한다"라며 "저는 새만금이 준비의 시기를 넘어 산업의 시기로 기대를 넘어 결과로 자리잡는 등 가능성이 현실화 되도록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노후 주택 많은 동네도 정비사업 추진"

국토부,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내일부터 본격 시행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2025년 8월 29일 공포)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 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가로주택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씩 적용한다.



또한 토지등 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 체 동의요건을 토지등 소유자가 5명 이상인 경우로는 토지등 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상향한다.

그간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상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시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시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공인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요건의 인건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

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축물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건축물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통합심의의 대상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사,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개별 심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인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택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택입해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져 있었다. 이에, 신택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해 신택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권희성 기자

6월 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군민 생활 개선 군정 펼칠 것" |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 임실군수 출사표

김병이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가 2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지자 50여 명이 참석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박정규 도의원은 자리해 힘을 보탰다.

김 예정자는 출마 선언문에서 "임실의 10년을 바꾸겠다는 간절하고 단단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의료 접근성 문제 등 군민 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가 군민의 한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군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정자는 첫 번째 공약으로 전 군민 1인당 10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임실의 농지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고령화 대응 정책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실·신평·오수 농공단지를 잇는 경제 삼각벨트 구상도 발표했다.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이 2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유치로 체류형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예정자는 "임실은 자치만 미래의 방향까지 짤 이유는 없다"며 "이념이 아닌 실용 구호가 아닌 설계, 말인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장에 찍히는 변화와 가게 매출로 느껴지는 변화를 통해 사람이 돌아오고 소득이 커지는 임실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 예정자는 1962년 임실군 지사선 출신으로 전주대 법학과 학사 졸업 후 전북도 정보과학대학원 을 수료했다.

한평생 임실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유제품 산업 발전과 치즈 생산 기반 확대에 기여한 기업인 출신이다.

임실군 체육회장을 역임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써 왔다

/01만호 기자·임실=진홍영기자

"쌀값 안정·가축질병 방역, 농민 생존과 직결"

민주 윤준병 의원, 쌀값 안정·가축질병 대응 점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5일 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민축산식품부로부터 쌀 수급 안정 방안과 가축질병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2025년산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안팎을 매각이 아닌 대외 방식으로 공급하고, 15만 톤 가운데 10만 톤을 우선 시장에 풀어 상황을 보

며 추가 공급 시기를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윤 의원은 쌀값 상승률만 강조한 정부 보고는 기저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대며 농민이 체감하는 가격 현실화를 주문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 돼지열병(ASF)·구제역 등 동절기 가축질병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윤 의원은 양돈용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료 사용 중지와 철저한 역학조사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쌀값 안정과 가축질병 방역은 농민 생존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01만호 기자



"하이퍼 창업도시 전북 선언"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창업 활성화 정책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12·3 내란 당시 전북도청 폐쇄 없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전북개발운동본부의 '12·3 내란 관련 반민주 부적격 후보 지목'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사실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대응과 관련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헌정 질서 수호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사례"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외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12·3 민주헌정 수호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도청 청사 폐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당일 오후 11시 20분경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입 통제 관련 유선 지시가 당직 사령에게 전달돼 각 시군에 기계적으로 전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물리적 통제나 청사 봉쇄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사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도 기존 방호 체계가 유지됐다고 밝혔다. 내부 행정기록에는 자정 30분까지 약 120명의 직원 출입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01만호 기자

익산 미래 위한 정책 연대 공식 선언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와 협력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손을 맞잡고 정책 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두 인사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의 미래를 위한 협력 결단임을 강조하며 선거 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최정호 예비후보는 이날 "익산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청년 유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천거의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병관 전 부지사와 정책 연대에 합의했음을 공식화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선택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최병관 전 부지사의 익산 시장 예비후보 사퇴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최 전 부지사 역시 정책 연대를 통해 익산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두 후보 간 협력이 단순한 선거 연합을 넘어 정책 중심 협력이라는 점이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정치는 경쟁할 수 있지만 행정은 협력해야 한다"며 "좋은 정책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시민



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출처를 따지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시장 후보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공동 추진 과제로 △공공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익산 성장배당' 제도화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햇빛배당' 모델 구축 △체류형·경험형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디자인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결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대에서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최병관 전 부지사는 정책 설계와 행정 혁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최정호 예비후보는 실행과 제도화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01만호 기자·익산=이재춘기자